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임시회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2. 7

행정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첫마을 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 호

나. 제 안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다. 제안일자 : 2012. 7.

라. 회부일자 : 2012. 7.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나성어린이집 / 송원 어린이집
- 소재지 : 남면 나성리 / 남면 송원리
- 시설규모 : 나성어린이집(872.39㎡) 송원어린이집(885.82㎡)
- 개관일 : 2012.11월
- 수용인원 : 각 100명
- 인 력 : 각 14명(원장1, 교사13)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 5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첫마을 어린이집은 금년도 첫 개원하는 시설로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임

* (준공예정일) '12. 7월 → (개원예정일) '12. 11월

4.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첫 마을 입주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수용된 시설을 활용하여

* 첫마을 인구 : 7,354명 / (1단계) 5,748명 (2단계) 1,606명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첫마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필요성

- 현재 첫마을(한솔동)에 입주한 주민의 세대 구성원을 분석해 보면 취학전 아동수가 어린이집 시설 정원(200명)보다 많은 715명으로
- 중앙부처 이전시기 및 첫마을 아파트 입주인구 증가추이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운영 준비 등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첫마을 취학전 영유아 수>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원(명)	123	150	138	147	149	155

- 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재산관리는 국가(행복청) 소관으로 세종시 재산은 아닌 관계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첫마을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설치 운영할 세종시 공립어린이집은 첫마을 입주민들의 취학전 아동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 금년하반기부터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취학전 자녀들의 보육 환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부의 결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관리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 직영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 정부청사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참고자료 1>

타시도 영유아 보육시설 민간위탁 사례

시 도 명	기 관 명	민간위탁 절차	비 고
서울	본 청 종로구 강남구	조 례 없 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부산	본 청 동 구 북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구	본 청 중 구	별도규정 없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광주	본 청 동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인천	본 청 중 구	별도규정 없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울산	본 청 중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경남	본 청 창 원	별도규정 없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전 남	순 천	시의회 동의	

* 순천시의 경우 조사대상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근거도 개별조례가 아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

<참고자료 2>

첫마을 이외의 민간위탁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시 설 명	시 설 장	인 가 일	아동현황		위탁기간	
			정원	현원	부 터	까 지
족 림	김 인 숙	1982. 4.21	129	129	2010. 1. 1	2012.12.31
연 기	하 재 동	1993.12.31	128	128	2011. 1. 1	2013.12.31
신 흥 푸르지오	황 인 숙	2007.10.15	39	39	2010. 8.20	2013. 8.19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2. 7

행정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 호
- 나. 제 안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다. 제안일자 : 2012. 7.
- 라. 회부일자 : 2012. 7.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기간 : 2008~2012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여 수립한 금년도 시행 계획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여성위원 참여 목표를 40%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 하여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안 제3조 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여성참여 확대(안 제3조 제1항)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 이를 위해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12.8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를 40%이상으로 결정
- 안 제3조 제1항의 여성참여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목표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 여성의 역량 강화 등 국가적 여성정책 방향에 세종시도 동참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여성참여(조명칭)비율을 강조하면서 내용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법령 등의 내용은 누구봐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여야 함에도 현행보다 더 혼란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바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 서울시 및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현행안 내용에 비율만 개정하는 방식
 - * 여성가족부(담당 박동혁서기관)와도 협의 하였음
- 여성참여비율 40% 이행기간도 2012년 말까지 이므로 이부분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기구에도 준용(안 제3조 제2항 신설)

-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 위원회 위원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선언적 규정을 불필요하게 신설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됨
 - 이 조항은 여성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 될 사안

<참고자료>

시도별 여성참여비율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자료

시도명	위촉직			비 고
	전체	여성	여성비율	
서 울	654	220	33.6%	30개 위원회
부 산	423	141	33.3%	
대 구	399	87	21.8%	
인 천	406	134	33.0%	
광 주	361	118	32.7%	
대 전	458	150	32.8%	
울 산	378	106	28.0%	
경 기	467	205	43.9%	
강 원	456	159	34.9%	
충 북	373	126	33.8%	
충 남	333	113	33.9%	
전 북	406	115	28.3%	
전 남	302	106	35.1%	
경 북	429	159	37.1%	
경 남	415	125	30.1%	
제 주	451	153	33.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2. 7

행정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 호
- 나. 제 안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다. 제안일자 : 2012. 7.
- 라. 회부일자 : 2012. 7.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착오로 잘못 표기된 동의 명칭 중 “박연동”를 “나성동”으로 바로 고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 조례 <별표2> 세종특별자치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서 법정동명 “박연동”을 “나성동”으로 함

4. 검토의견

가. 법정동명 명칭개정(별표2)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2012.7.1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시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바로 고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으로

- 제출당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에는 "나성동"으로 표기되어 의결 되었으나
- 같은날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2>에는 "나성동"을 "박연동"으로 잘못 표기 되었음
-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하루 빨리 개정이 시급한 사항이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고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승인관련 문서 사본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2. 7

행정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가. 발 의 자 : 장승업 의원외 4명

나. 제안일자 : 2012. 7.

다. 회부일자 : 2012. 7.

2. 제출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중 상위법인 문화재법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바로 고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정의)에서 “민속자료”를 문화재법에 맞게 “민속문화재”로 용어를 통일(안 제2조제1항제4호)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이를 삭제 함(안 제31조)
- 기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 (안 제31조)

4. 검토의견

- 문화재보호법상 용어와 같게 개정하고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